

서울시정관련 연구동향

행정·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수도권 정책방향 전환 연구

국토연구원 | 연구보고서 | 2012.12.30

http://www.krihs.re.kr/html/2_paperInfo/report_read.asp?id=3597010&page=1&search_kind=0&search_text=지방이전에 따른 수도권 정책방향 전환 연구&search_text1=&r_kind=4&start_year=0&end_year=0

행정·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연계한 수도권의 단계별 전환 방향으로 단기는 종전부동산의 활용 및 '제 3 차 수도권 정비계획'의 수정·보완, 중기는 수도권 정비계획의 기능 강화, 장기는 전면적인 수도권 정책방향 전환 추진

- 배경 및 문제점
 - 2012 년부터 행정·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115 개 부동산의 매각이 진행 중
 -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정책은 수도권 정책 측면에서 종전부동산 활용방안의 제시가 미흡하고, 일반매각 위주의 종전부동산 처리로 인한 과도한 개발 우려
- 정책제언
 1. 단기 : 수도권 정책방향 전환의 준비기
 - 종전부동산의 활용추진 방향으로 '제 3 차 수도권 정비계획'의 수정·보완 추진
 - 수도권 정비권역의 조정방안으로 인구밀도 5,000 명/km² 미만 지역을 우선적으로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(서울은 2020 년 기준 약 1 만 6 천명/km²)
 2. 중기 : 수도권 계획체계 개편
 - 수도권 정비계획 법령정비로 수도권 계획의 위상강화
 - 수도권 계획에는 광역교통 개선, 경제 및 산업 활성화, 주거 및 문화·복지 개선, 광역적 환경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
 3. 장기 : 새로운 대도시권 발전전략의 모색
 - 서울 및 인접 인구밀집 지역의 글로벌 대도시권 육성 검토
 - 서울 대도시권에서 세종-대전까지 연결되는 메가리전(Mega-Region) 발전 전략 모색

지출기준 빈곤율과 계층간 이동성 분석

한국보건사회연구원 | 보건복지 Issue&Focus 제 176 호 | 2013.2.8

http://www.kihasa.re.kr/html/jsp/share/download_forum.jsp?bid=21&aid=236&ano=201

저소득계층이 중·상위계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계층간 이동성이 낮으며, 향후 정책수혜 대상 선정할 때 빈곤의 지속성이나 빈곤경험년수의 포함이 필요

- 배경 및 분석 결과
 - 1990년대 말의 총소득과 총지출간의 빈곤율 차이는 약 10%p이었으나, 최근에는 빈곤율 격차가 줄어들고 있음
 - 총지출은 1997~2005년 아주 완만하게 하락하였으나, 2005~2009년 등락을 거듭한 반면, 소득빈곤율은 비교적 일정
 - 저소득계층이 중·상위계층에 비하여 이동성지수가 낮으며 이는 항구적인 불평등도가 높음을 의미
 - 1997년을 기점으로 지난 10여년간 빈곤그룹으로 진입가능성은 낮아지다가 최근에 다시 상승
- 시사점
 - 소득빈곤이나 소득이동성 외에도 지출빈곤 및 이동성도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, 빈곤기준선을 설정 시 지출기준도 유용
 - 정책 수혜대상의 선정 기준으로 빈곤의 지속성 또는 빈곤 경험년수를 포함
 - 근로빈곤층의 비노인 남성가구주는 대부분 일시적인 빈곤을 경험하는 그룹인 반면, 노인가구와 비노인 여성가구는 지속적으로 빈곤에 머물러 있는 그룹임
 - 지속빈곤그룹이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정책대상 그룹으로 이들은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획득으로는 빈곤탈출이 어려움
 - 빈곤이행과 관련하여 취업 여부와 취업의 질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, 최근 자영업을 시작하는 그룹에서 반복 빈곤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음
 - 향후 빈곤을 경험한 가구들의 이질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며, 유형별 분석에 바탕을 둔 정책대상그룹 설정이 필요

신노면 대중교통시스템 도입에 관한 연구 - 트램을 중심으로¹⁾

한국교통연구원 | 연구보고서 | 2012.10.31

<http://lib.koti.re.kr/viewer/MediaViewer.ax?cid=131461&rid=5>

빠른 교통수단이 아닌 접근이 편리한 교통수단도 타당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시정책의 전환 및 도시 내 교통수단의 도입과 도시개발을 연계하여 평가할 수 있는 방안 구축

- 트램의 필요성 및 관련 제도 정비방안
 - 트램은 이동성 보장이라는 목적에서 더 나아가 도시의 다양한 문제해결의 수단으로 활용 가능
 - 트램사업의 편익산정은 표정속도의 향상보다 접근성 개선,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공간 형성 등에 주안점을 두어야 함
 - 트램을 도시교통의 전체적인 시각에서 보아야 하며, 이에 걸맞은 법·제도적 정비 필요
- 정책제언
 - 빠른 교통수단이 아닌 접근이 편리한 교통수단도 충분히 타당성을 가질 수 있는 도시정책으로의 전환 필요
 - 트램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도시 평면교통체계를 구성하는 버스, 자전거, 보행 등과의 편리한 연계가 중요
 - 국내에서도 트램 도입을 계기로 도시 내 교통수단의 도입과 도시개발을 연계하여 평가할 수 있는 방안 구축

1) 본 보고서는 한국교통연구원 KOTI-Brief Vol.55 호(http://www.koti.re.kr/board/publication/index.asp?code=publication_regular&cate=13&mCode=040501)에 요약본이 수록되어있습니다.

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과 자녀의 만혼화

한국보건사회연구원 | 연구보고서 | 2012.12

http://www.kihasa.re.kr/html/jsp/publication/research/view.jsp?bid=12&ano=1507&key=&query=&ryear_value=0&content_type=1&querySt

만혼화의 해소 방안으로는 결혼비용 절감 대책, 청년취업 유인 정책, 가정친화적인 직장제도 정착, 남성의 가사 및 양육에 대한 책임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 등이 필요

- 만혼화의 배경 및 문제점
 - 저출산 문제의 한 원인은 만혼화 현상
 - 저출산은 생산가능인구의 부족으로 인한 생산성 하락, 젊은층의 부양부담 과중화, 복지수요의 급속한 증대를 통한 재정건성성의 악화 등의 문제 야기
- 시사점
 1. 결혼비용의 해소
 - 신혼부부의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 확보를 용이하게 하든지, 아니면 월세에 대한 유인을 제고하는 식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책 방향 재편
 - 셀프웨딩 결혼문화 또는 웨딩산업협동조합 운영 등을 통해 결혼비용 절감 방안 검토
 2. 청년실업 해소 및 노동시장 개혁
 - 노동시장의 이동성을 확대하거나 비정규직 비율을 낮추고,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취업의 유인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
 - 청년에게 보다 많은 좋은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개혁이 필요
 3. 일과 가정의 양립 및 양성평등 확립
 - 가사노동 부담으로 인한 여성의 사회참여 장애와 경력단절은 여성이 결혼을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
 - 야근과 주말 근무는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배가시키므로 가정친화적인 직장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도 필요
 - 육아에 친화적인 직장문화의 형성과 남성의 가사 및 양육에 대한 책임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

범죄의 시공간시물레이션 분석을 통한 안전도시 관리전략 연구

국토연구원 | 연구보고서 | 2012.12.31

http://www.krihs.re.kr/html/2_paperinfo/report_read.asp?id=3597034&page=3&search_text=&search_text1=&r_kind=4&sta

안전도시 관리전략으로는 면적 정비개념 도입과 공공 공간의 안정성 강화, 지역별/시간대별 치안의 불균형과 격차 해소를 위해 맞춤형 범죄예방의 도시계획 적용기법 마련 등

- 배경 및 사례분석 결과
 - 범죄예방환경설계는 범죄의 원인을 환경적인 요소에서 찾고, 도시설계 및 공공디자인을 통해 사전에 예방까지 할 수 있다는 적극적 도시설계의 개념
 - 우리나라의 범죄발생은 지난 20년간 증가추세이며, 범죄발생과 치안의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됨
 - 서울은 각 구별로 치안의 불균형과 격차가 존재하므로 구간 범죄예방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역맞춤형 방법계획의 고려가 필요
 - 범죄다발지구는 저녁과 심야 시간대에 쇠퇴한 골목길, 상업과 주거가 혼재된 점이지역, 주거와 녹지가 혼재된 점이지역,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등에서 형성
 - 현행 국토종합계획과 지구단위계획에는 범죄예방에 관련한 사항이 없으므로 도시계획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통한 시행방안 마련
- 정책제안
 - 도시범죄가 발생하는 공격 공간의 제거를 위해 광역차원의 면적 정비개념 도입과 방어 공간의 조성관리 위한 녹지와 공원의 활용
 - 지역별/시간대별 범죄발생의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도시계획 차원의 방법계획인증제도 (SBP, Secured by Planning)의 도입
 - 범죄취약지역에 대해 현행 용도지구의 방화지구 및 방재지구와 같은 “범죄안전관리지구”나 “방법지구” 도입
 - 도시계획차원의 범죄예방 기법을 국토계획법, 주택법 등과 연계하는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
 - 범죄발생의 지역별/시기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범죄 기초조사의 정례화 및 과학적이고 공개적이며 객관적인 범죄분석의 토대 마련

도시 지하공간 조성에 따른 환경영향 관리 방향 연구

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| 연구보고서 | 2012.12.10

<http://www.kei.re.kr/userBoard.kei?>

[ynUser=Y&tpCode=DD41&formDiv=MD10&menuCode=0101&menuLan=KOR&pgMode=view&kbddSeq=75715](http://www.kei.re.kr/userBoard.kei?ynUser=Y&tpCode=DD41&formDiv=MD10&menuCode=0101&menuLan=KOR&pgMode=view&kbddSeq=75715)

지하공간 환경관리 방안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비전 수립, 지하공간이용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이용 가능성, 깊이, 소유권 등에 따른 맞춤형 이용체계 수립과 관련법 개편 등

- 배경 및 필요성
 - 현재 전 세계인구의 50% 이상이 도시에 거주, 2050 년 70% 전망
 - 교통 분야를 중심으로 한 기반시설의 지하화가 빠르게 진행
 - 지하공간 이용의 환경적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계획과 규제를 도입할 정책적 필요성 고조
 - 도심도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시점에서 지하공간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전의 필요성 증대
- 정책 방향
 - 지속가능한 지하공간이용을 위한 정책비전 제시
 - 환경친화적저영향개발(Low Impact Development) 지하공간 조성 개념 도입
 - 지하공간이용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이용 가능성, 깊이, 소유권 등에 따라 지하공간을 구분하고 각 구분에 대한 맞춤형 이용체계 수립
 - 효율적인 지하공간관리를 위한 관련법 개편
 - 지하수이용 및 지반침하 관련성에 대한 정보수집
 - 생태면적 산정 시 심도에 대한 고려

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이주민 지원 방안

한국지방행정연구원 | 기본보고서 | 2012.12.31

<http://www.krila.re.kr/?code=research&subp=0201&bbsid=research0101&lcode=&mcode=&gbn=viewok&cate=25&ps=10&sp=subject&sw=다문화사회&gp=1&ix=5135>

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사회 개선방안은 다문화사회 지원체계 마련, 지역단위 다문화사회지원 거버넌스 구축,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생활정책 지원방안, 다문화사회 이해분위기 조성

- 배경 및 문제점
 - 2012년 6월 현재 국내거주 외국인수는 약 140만 9천명으로 주민등록인구의 2.6% 차지
 - 외국인의 수가 급증하는 반면, 이들의 사회부적응 사례증가, 정착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국민편견 존재
- 개선방안
 1. 중앙정부의 이주민정책 개선방안
 - 부처별 이주민정책의 역할분담 및 추진
 - 다문화사회관련 법·조례의 정비를 통한 중앙과 지방 간 역할 분담의 명확화
 - 다문화사회 정책지원법의 통폐합
 - 행정안전부의 이주민 지원체계 강화
 - 질 높은 사회통합정책의 강화
 2.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사회 개선방안
 -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사회 지원체계 마련
 - 지역단위 다문화사회지원 거버넌스 구축
 -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생활정책 지원방안
 - 다문화사회 이해분위기 조성

고령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- 제조업을 중심으로

KIET 산업경제 | 2013.3.18

http://www.kiet.re.kr/kiet_web/?sub_num=12&state=view&idx=41512

고령화는 직접적으로 노동생산성의 하락을 유발하나, 평균 교육연수 증가,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, 자본결합도의 증가 등으로 완화되며, 지역별로는 제조업의 산업구조와 연령별 인구구조에 따라 상이함

- 배경
 - 최근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및 취업자의 고령화로 인한 노동생산성의 하락과 경제성장 둔화의 우려가 고조
 - 취업자의 평균연령은 2010년 41.4세(서울은 40.5세로 가장 낮음)
 - 제조업 취업자의 평균연령은 40.4세이며, 서울은 제조업의 취업자 연령이 취업자 전체보다 높음
- 고령화가 노동생산성에 부정적 요인만이 아닌 이유
 - 고령화로 인한 비숙련 생산인력의 노동생산성 하락은 외국노동자의 유입으로 해결(2010년 기준 외국인의 63.9%가 수도권 거주)
 - 숙련근로자의 고령화로 축적된 경험은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
 - 제조업 근로자의 고령화 이면에는 노동생산성과 직결되는 근로자 학력수준의 향상(15세 이상 인구의 평균 교육연수는 2000년 11.9년에서 2010년 12.6년으로 상승, 서울은 13.3년)
 - 노동단위당 자본결합도의 증가로 고령화 영향 완화
- 정책적 시사점
 - 고령화로 인한 직접적인 노동생산성 감소는 서울, 부산, 대구가, 간접적인 영향을 고려하면 부산과 대구지역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된 반면, 서울은 보통 지역군에 속함
 - 고령화는 직접적으로 노동생산성의 하락을 유발하나, 평균 교육연수 증가에 따른 노동의 질 향상,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, 자본결합도의 증가 등으로 상당히 완화됨
 - 지역별로는 제조업의 산업구조와 해당지역의 연령별 인구구조에 따라 고령화 영향이 상이함

※ 본 자료는 연구 활동 및 시정 업무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된 것임.

서울연구원 도시정보센터 출간자료팀
email: urbandata@si.re.kr
phone: 02-2149-1022